



사진 © 양희석

# 안 될 거 없잖아, 서울기본소득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어

이관형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3월 말인데 벚꽃이 한창이다. 합정동 연구소를 나서서 여의도 기본소득 당사를 향한다. ‘따릉이’를 타고 한강변 자전거길을 달린다. 겨울과 여름이 교차하여 얼굴을 스친다. 결코 섞이지 않는다. 언제부터 인지 겨울과 여름만 있는 듯하다. 얼굴을 때리던 겨울과 여름이 서강대교를 건너니 찾아든다. 좌측에 세계 제일이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들어온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라는 계시록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난 미지근한 봄, 가을이 좋은데..., 신의 토사물이 될지언정...

서울시장 선거도 겨울과 여름만 있는 것 같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나부낀다. ‘따릉이’를 반납하고 길을 잘못 들어 파란색 당사로 간다. 앞을 지키는 젊은, 아니 이제 어려 보이기까지 하는 전경대원(?)이 기본소득 당사를 알려준다. 군인 아저씨라 부르던 시절에서 군대 간 아들을 둔 아저씨로, 이미 제대한 아들을 둔 아가 아저씨(?)로 변화해왔다. 처지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니 한때의 용맹정진으로 얻은 지식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인가? 건물에 도착했으나 기본소득 당사임을 알려주는 어떤 표지도 없다. 앞에서 대화 중이던 사진 담당 양 선생과 신 후보의 얼굴이 보이니 제대로 찾아왔다.

건물 4층과 7층을 당사로 사용한다. 4층에 내려 인터뷰를 진행할 방으로 들어간다. 가구가 거의 없다. 유독 의자가 많다. 실제로 많았는지 다른 가구가 없어서 많아 보였는지 모르겠다. “기억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튼 조병화의 ‘의자’가 불현듯 생각났다. 뭐 이렇다 할 ‘의자’에 앉아본 적도 없지만 젊은 신지혜들을 보면서 물려줄 의자는 아니더라도 지탱할 의자는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 했다. 그럴 힘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물론 들었다.

4층과 7층은 모두 민트색이다. 일하는 이들도 그렇고 벽을 뒤덮은 플래 카드도 그렇다. 색의 이름을 몰랐다. 여름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신록의 우거짐을 빗대서 그렇다고 한다. 내 느낌으로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질문을 항상 준비하는데 이번엔 많이 못했습니다.

- 괜찮습니다. 얘기를 많이 해서 이력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계간《기본소득》이 선거 전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거 후에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 그렇겠네요. 지금 1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질문준비를 하면서 원래는 선거에 포커싱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 선거 이후에야 책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처럼 준비를 해도 되나? 다 끝난 다음에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두서없는 질문이 이어지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 혹시 마감일이 4월 7일이에요?

아니오, 3월 말까지는 다 하기로 했는데, 실제 진행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4월 7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선거가 4월 7일이죠?

- 네.

요즘 선거 때문에 경황이 없으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선거 얘기를 해야겠네요. 요즘 돌아보시니, 선거 상황이 어떠십니까?



사진 © 양희석

## 4가지 기본소득과

### 7가지 기본 서울 정책으로 맞설 것

- 이제야 서울시장 후보의 대진표가 확정이 되었고, 내일이면 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이 기도 한데요. 지금은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선 기본소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서 4가지 형태의 기본소득을 담은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 드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도 도지사님도 기본 시리즈를 많이 내고 계신데, 서울 시민들의 기본권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 7가지를 꼽았고, 그 7가지를 ‘기본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준비해서 선거를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 반응은 저희가 이번에 선거 준비를 하면서 33곳의 시민단체를 만났고, 지금도 계속 정책협약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단체들 중에서 특히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얼마

전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낙연 의원이 아동청소년수당을 만18세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동청소년수당 관련한 입법을 해 보려고 아동청소년단체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도 청소년 관련 단체들, 특히 후기 청소년이라고 부르거나 후기 청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이 소외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소수정당, 신인에게 홍보 기회 주는 제도 개선 필요성 실감

사실 양대 정당들, 기성 정당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는 홍보를 하지 않아도 미디어들이 따라와 주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많은 인력들이 많은 돈을 들여 홍보를 하잖아요. 돈, 인력, 기존 미디어의 취재 관행 등 모두에서 열세여서 홍보에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저도 기존의 미디어를 통해서 빛기를 원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잘 안 보이네요.

- 네, 검색을 해야 겨우 볼 수 있는.

이미 예견된 상황인데, 혹시 돌파할 길은 없을까요?

- 선거법 자체에서도 불공정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홍보 부분에서는 인터뷰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야 하는데, 언론사나 TV, 라디오 이런 매체들에서는 단일화가 화두였다 보니까 지난 3개월 동안 단일화 어떻게 할 건지, 단일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거대 양당이 아닌 다른 후보들은 일찍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도 왜 출마했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짧은 13일 동안은, 본선 기간만큼은 몇 차례라도 부디 매체에서 소개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훌륭한 어젠다가 있어도 전달에 원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답답하더라고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어찌보면서도 막상 뾰족한 대책이 떠오르지 않아요.

- 의미 있는 제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얘기되긴 했습니

다. 조정훈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시간에 정치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모든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이 불공정한 언론 보도 관행에 대해 국민들께서 같이 문제제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양당 후보들이 결정이 됐잖아요? 대진표가 짜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양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나가도 특별히 선거법에 문제가 되진 않겠지요?

- 문제 안 됩니다. 두 후보 모두 불평등한 서울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5년, 10년의 장기 계획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정당 모두 각자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위한 정권교체인지, 무엇을 위한 정권 재창출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많은 서울시민분들이 답답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당에서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10년 서울은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는 비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최소한 많은 서울시민께 이러한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무리를 해서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양대 정당 후보 모두 불평등 개선 계획과 비전 안 보여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더 구체적이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세훈 후보랑은 뭐가 다르고, 나는 박영선 후보랑 뭐가 다르다고 말씀하셔도 좋고, 우리 입장은 이런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구요.

- 박영선 후보님과 관련해서 토지임대부 주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 그만큼 한계를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 후보께서 토지임대부 주택에 접근하시게 된 계기는,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토지에서 기인한다고 보시기 때문인데 이것은 옳은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정부 여당이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주택, 기존 있던 부동산에 대한 토지정의를 세우지 않은 채로 새롭게 짓는 데에만, 다시 말해 분양공급에만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그동안의 서울의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너무 약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 10년 전 보궐선거 귀책사유가 있는 후보 아닙니까? 그 귀책사유가 무상급식을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당시 무상급식 하면 재정파탄 난다고 말씀하셨던 분 답게, 기본소득이 아닌 안심소득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체계가 만들어진 지난 20년 동안 선별지급을 통해서 누가 지원을 받았는가? 과연 그 지원을 통해 격차가 줄어들었는가? 성과가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격차해소와 관련해서 너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심소득이 아니라 기본소득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오후보님과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모든 서울시민들이 서울시민의 몫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신 후보께서는 불평등의 근원으로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시고 부동산 안정화를 주장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부동산 안정화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 부동산 안정화의 모습이 무엇이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본소득당이 만들고자 한 부동산 안정화의 핵심은 너무 치솟은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게 한 가지 핵심이고요. 두 번째가 모두가 누려야 할 서울의 부동산 가치를 기본소득으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체제로 만드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할 때 핵심은 토지 가격입니다. 토지 가격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전월세 비용과 공공임대주택 가격까지 아니 그것을 넘어 심지어는 쪽방촌의 가격까지 결정하는 핵심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형 토지세로 토지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서울의 기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방안이 아울러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 세금



사진 © 양희석

과 기본소득이 연결되었을 때 부동산 세금만큼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무주택자를 위한 최소한의 주거지원, 아주 현실적인 주거지원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가치 상승 혜택은 시민 모두가 누려야

그런데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일정 정도 이하로 집값이 떨어지면 중산층 이하까지도 줄줄이 막말로 여파를 미칠 수 있거든요. 재산 전부가 이거라. 그래서 기본소득당에서 말하는 건 좋은데 과연 사슬처럼 엮여 있는 이 상태에서 기본소득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관철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네. 실제로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증금 관련된 대출이거나 혹은 이 주담대일 텐데요. 주택보유자가 절반 정도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자기 자본으로 집을 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집값을 어떤 과정으로 떨어트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관련 세금과 기본소득제도가 결합한다면, 납부하게 되는 세금만큼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집을 살 사람들은 이 세금을 고려해서 집을 사야 하는 만큼 가격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모든 토지 가격의 0.8% 정도의 토지세를 매기는 경우 약 70조의 재원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연간 7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돌려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토지 정의에 보다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현실변화에 맞게 더 좋은 방안과 모델을 모색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담대가 상류층에서부터 서민층까지, 서민들도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자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집값 떼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연착륙 방안과 기본소득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병존할 수 있느냐, 급격한 부동산 가격하락이라는 경착륙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만.

- 저는 오히려 기본소득형 토지세가 연착륙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가구에서 주담대 비중이 다들 높기 때문에 토지세와 관련된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착륙할 수 있게 우리가 경기에 따라서, 혹은 그때 당시 주택가격에

따라서 연착륙할 수 있는 세율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담대 이외에도 가계대출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것은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 배당 통해 부동산 안정화와 연착륙 가능

기본소득당은 토지보유세를 거둬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전국적 차원의 대책이잖아요. 서울 차원에서는 어떻게 정책설계가 가능할까요?

-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유형의 기본소득을 한 데 묶어서 서울형 기본소득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고, 서울형 기본소득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연간 300만 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시 재원으로 하는 두 가지랑 말씀하신 대로 입법차원의 제도화를 통해서 가능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서울시 차원은 서울시의 부동산 세금, 재산세, 취득세, 서울시의 월세 수익, 재건축초과 환수금 등을 통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면 연간 80만 원 정도가 확보됩니다. 이밖에 서울시의 순세계잉여금이 3~4조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모든 서울시민에게 약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가 서울시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아서 좋긴 좋은데, 순세계잉여금을 다 써도 되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각 지자체에도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원으로 써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고, 얼마 전에 박영선 후보님이 말씀하신 건 4조 정도라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3조는 2019년 기준이었고, 2020년에도 불용예산이 꽤 많이 남아 있어서 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서울시가 이자를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쓰자, 이겁니다.

오히려 쓸 때다. 나쁜 상황을 대비해서 모으는 건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공감이 갑니다. 선거전략과 관련해서 기본소득 말고 다른 선거전략이라고 해야 될까,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 있습니까?

- 왠지 계간 기본소득이니까 기본소득 연관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 순세계잉여금 이자 받는데 쓰지 말고 배당해야, 지금이 쓸 때

아니에요. 다른 정책들도 소개해주시면 좋지요.

-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성평등, 공공주거, 기후위기, 돌봄, 노동, 데이터, 동물권, 이렇게 7가지를 담았고요. 그중에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서울시의 투자를 통해 기본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자립도를 높이되 태양광 발전을 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 협동조합을 처음에 설립하고 태양광 발전의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기는 투자수익에 대한 것을 모든 서울시민에게 나누는 태양광 배당을 향후에 실시하겠다,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한 전략이긴 하지만, 이거 한 가지랑 또 다른 한 가지는 데이터와 관련한 것인데, 서울시는 굉장히 데이터 공개를 잘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열린 데이터광장이라는 곳에서 각각의 정보들이 마구마구 공개되는데 그게 개별 시민 한 명, 한 명한테는 그렇게 쓸모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 모여 있는 정보들이 기업에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재료가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박영선 후보님도 그러셨지만, 구독경제, 데이터경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에서도 데이터 기반 산업을 창업하겠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서울시 재원이 들어갔다면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같은 경우 서울시 세금만큼의 수익을 데이터 배당으로 나누는 방안들을 조례로 만들 기반들을 만드는 것을 공약으로 삼고 있

습니다.

아까 7가지를 제가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언뜻 들을 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혼재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 7가지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기본소득과 관련한 토지세라든가 탄소세는 입법을 통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17명의 광역자체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국무위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에서 먼저 제안하고 정책비전을 보인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안될 건 없잖아 서울기본소득’을 슬로건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 기본소득 정책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마련해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 알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두루 적용되는 공통분모잖아요? 그래서 여러 정책을 포괄하는 기초인데, 한편으로는 ‘원포인트 정당’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야, 저 사람들은 기본소득만 얘기하려나? 건설도 해야 되고,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 저희가 창당한 지 1년 2개월만에 두 번째 선거를 치르고 있어요. 실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총선을 치를 때는 모든 분야에 대한 공약까지는 만들지 않아도 됐던 상황이긴 했거든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더 해서 공공복지를 강화하는 몇 가지 제안, 예를 들면 무상교통이라든가 무상교육을 더 많이 활성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함께 제안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대응하는 이 선거는 천만의 서울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꾀해야 될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의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 해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서울의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 같이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7개의 기본 서울 정책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국민 삶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의 내용을 충분히

6개월간 열심히 준비했고, 평등한 서울 유니버스를, 33곳의 단체와 간담회를 하면서 차곡차곡 쌓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방자치, 지방분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 내의 불균형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지역격차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구의 40% 이상이 서울, 경기도에 몰려 살고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 분산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사람들에게 이사하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사람에게 안정적인 소득보장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이 서울이라는 곳에 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 지역격차,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정책으로 풀어야

요즘 부동산이 이슈니까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신상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정치인으로서 아직 젊은, 어쩌면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 저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발달장애 어린이들을 만나는 자원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하면서 강남의 판자촌 마을인 포이동 재건마을에서 공부방 운영하는 자원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분들이 장애인 차별이나 혹은 주거안정, 주거지원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을 찾아다니는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많은 정치인들은 애초에 만나주지 않거나 혹은 약속하지 않거나 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렇게 차별받고 힘이 없는 사람들 옆에 있는 정치가가,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정당에 가입을 해서 후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요. 그러

다가 나중에 운영했던 공부방 마을에 큰 화재가 났어요. 공부방에 15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그중 11명이 집을 잃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화재였거든요. 그날이 일요일이었고 다음날 당장 애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모든 건 다 타버렸고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무작정 공부방 선생님 4명과 같이 마을회관 7~8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집을 잃은 11명의 아이들과 샘들 포함해서 15명이 복작복작하면서 2달 간 같이 살았거든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마을이 다 타버렸으니까 냉장고도 타고 다 탔는데, 냉장고의 음식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강남구청은 화재 잔재를 치워주지 않는 거예요, 한 달 넘게. 건강에 너무 해롭고 약취문제도 심각하고, 주민들이 마을회관 한 곳에 모여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도 행정은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주거복구를 시민들이 모금을 해서 직접 시민들 손으로, 주민들 손으로 직접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4번이나 강남구청은 부셨어요. 용역깡패를 사서. 그리고 나중에는 용역깡패를 고용할 때들인 돈을 주민들에게 청구하기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폭력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힘이 필요한데, 그때 제가 봤던 그 마을을 방문한 정치인, 흔히 사람들이 많이 아는 정치인은 딱 두 명 밖에 없었어요. 이 마을 주민들을 쫓아내기에 혈안이 돼 있는 강남구청장이 화재 난 다다음 날인가 한 번 왔었고요. 지금은 감옥에 계시거나 할 겁니다.

잘 찾아가셨네.

- 찾아오신 정치인 두 분 중 한 분은 그때 당시에 진보신당의 국회의원이셨던 것 같아요. 조승수 국회의원, 강남구청장과 조승수 의원, 이렇게 두 분 말고는 찾아오셨던 정치인이 전혀 기억나지 않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한 분만 찾아오신 거죠. 정당의 힘, 정치의 힘이 너무 필요한데 그러면 이 사람들 곁에 서 있을 정치인이 누구냐, 아무도 없다면 그 역할을 내가 할 수도 있겠다, 내가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열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다음 해부터 정당의 여러 역할을 맡으면서 정당정치 자체를 배우게 됐죠.

## 강남 판자촌 경험 통해

### 약자 대변할 정치의 필요성에 눈떠

그게 왜 노동당이었죠?

- 처음에 사회당이었어요. 사회당이 진보신당이란 합당했고, 진보신당이 이름을 바꾼 게 노동당. 기본소득은 2007년에 금민 대선후보 선거운동 하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을 만났고, 제가 만났던 장애인, 판자촌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너무 유용한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아서 그때부터 줄곧 지지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정당들이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아동수당이 확대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기본소득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정도부터 성평등이라는 것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많은 여성들이 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기본소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아주 중심의제로, 정책 정도가 아니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정당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몸담았던 정당을 바꾸고자, 체질 개선을 해 보고자 노력했으나 그 정당도 꽤 역사가 깊기도 했으니까, 거기는 노동 중심으로 가야 한다, 노동과 기본소득이 배치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음을 확인했고, 그래서 지금 있는 정당을 바꾸는 데 그렇게 계속 시간을 들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그릇을 만들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새로운 그릇을 만들기로, 즉 창당을 하기로 생각하게 됐던 거죠.

시장이라는 지위는 행정가, 정치인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현실과 실정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관내에서 뭘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구가 기층민중들의 요구일 수 있는데, 실정법으로서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저는 그러기 때문에 그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무엇이고 정치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거대양당에는 계속 안 보이는 상황이고, 기본소득당의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기본권인가 아닌가, 이것이 모두의 존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권리를 위한 분명한 행정 원칙이나 정치 기조를 가지고 돌파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 법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근원에는 정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정치는 법을 만들어내니까. 또 하나, 말씀 중에 그것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제가 전철을 탔는데 두 번이나 겪었어요. 멍 때리다가 어떤 여학생이라고 해야 되는지, 표현이 없네. 하여튼 젊은 여성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나를 짹 아래위로 훑더니 다른 칸으로 가요. 이걸 제가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거든요. 모멸감을 느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너무 제가 질문을 이상하게 던졌나요?

### 조용한 학살이라고 할 정도로 젊은 여성의 자살률 급증

-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지하철 뿐만 아니라 밤거리를 걸을 때 내 앞에 어떤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이 나를 굉장히 신경 쓰면서 걸어가는 듯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토로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럴 때 저는 그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대중교통이나 혹은 길거리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한 경험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경험들이 몸에 체화돼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너무 기분 나빠,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가 대중교통을 탈 때든 어떤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든 나의 안전에 큰 위협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함께 힘써 달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과도기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동안 아저씨가 희롱을 해도 불쾌감을 표시 못 했는데, 이제는 불쾌감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면.

- 변화의 신호일 수 있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 불쾌한 느낌은 이해하지만 젊은 여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불법카메라 문제도 있고, 아는 사람들한테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직장에서도 워낙 그런 일이 많으니까요. 얘기가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90년도에 태어난 여성들의 자살률이 놀라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직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 혐오의 분위기 속에서 희망을 못 찾는 여성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요?

- 네. 지금 '조용한 학살'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자살률이 엄청 급증했어요. 전년 대비 43%.

저도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어쨌든 과거가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나마 개선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오히려 과거보다 더 늘어났을까요?

- 지금 관련한 토론회도 많이 하고, 특히 청년들이 주최하는 토론회에는 그것이 중요 이슈예요.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도 생각해 보면 지금 나이의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놀랍게도 공부를 너무 잘해요.

### 여성들의 능력 뛰어나도 사회적 차별의 벽은 여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 대학진학률도 여성이 더 높죠. 여성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면서도 불구하고 사회에 나가는 순간 여성이라는 이유

로 너무 많은 벽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취직, 승진, 그리고 워낙 데이트 성폭력도 많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지요.

그나마 학창시절까지는 남녀평등 분위기가 옛날부터는 나아졌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진출해 보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 박탈감, 상실감이 오히려 클 수 있겠네요.

-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는 여성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성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선생님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성들이 그런 걸 잘 참을 수가 없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시작하면 계속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선생님 저 발언이 문제예요, 얘기를 해도, 혹은 저 선생님이 성추행을 했어요,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험을 계속하는 거죠.

여전히 그래요?

- 네. 지금도 스킨미투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나아지긴 했지만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어쨌든 사회에 나가는 순간 더 많은 벽들을 확인하게 되고, 이것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고, 이번에 코로나로 일자리 고용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소득불안정에 더 많이 노출되었던 계층이 청년이자 여성이기도 했고, 그래서 일자리 줄어든 걸 보면 20대, 30대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이 작년과 대비해서도 확 드러나더라고요.

오히려 사회 분위기는 자립해야 되는 요구는 더 커졌는데.

- 그렇죠. 워낙 1인 가구가 더 늘기도 한 시점에서 거의 각자도생 하듯이, 사회안전망은 불안하고 각자도생해야 되는데, 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이 차별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심지어 그 어느 곳에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고, 당장 손을 내밀 수 있는 네트워크도 없고, 그런 것들이 그런 선택을 많이 하게 하지 않나, 하는 연구결과들이 이제 꽤 많이 나왔어요.

페미니즘 관련해서 기본소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나요? 회의적인 분들도 계시던데.

- 페미니즘 관련해서 지금 여성의 당이라고 정당이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많은 여성이 기본소득이 성평등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여성에게 더 많은 돌봄을 강요하지 않을까? 기본소득 받으니까 바깥일 하지 말고 가사노동을 하도록 강제되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그러신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고용환경, 노동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많은 여성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나왔는데, 세대주한테 주지 말고 각자한테 주라고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누군가의 딸이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니어도, 누구 엄마로 불리지 않더라도 이 한 사람 자체로 존중받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더 기본소득을 여성들이 지지하시기도 하죠.

## 여권 신장 관련해서도 기본소득이 큰 도움될 것

지금 선거국면이라 선거 관련된 얘기만 계속했는데, 개인적으로 시장이 되든 안 되든 향후 일정, 본인의 일정, 계획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 오늘 오전에 있었던 첫 번째 인터뷰에서 그런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는데...

어떤 언론이든, 다 물을 것 같아요.

- 선거가 끝났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3개월이 지나 7월 7이 되었다. 당선되었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낙선했으면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더 포괄적인 질문이지만, 그것도 좋습니다. 재미 있네요.

- ‘임기 첫날에 뭐 할 거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보궐선거 발생한 이유를 생각해서라도 서울시 공공 부문 성폭력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사진 © 양희석

그러면 100일 정도 지난 시점이면 전수조사는 끝났고, 성평 등 업무지침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6월 1일은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데, 이 재산세 기준으로 2022년에 서울형 기본소득 어떻게 지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행계획, 7대 기본 서울을 약속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행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것 말씀드렸고요. 만약 낙선하게 된다면.

### 임기 첫날 서울시 공공부문 성폭력 전수조사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웃음)

- 또 준비해야죠.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지금 당장 해야 하는 불평등 해소조치들도 있고, 5년 10년을 바라봐야 되는 장기과제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함께 서울시민들께 공약으로 제출했는데요, 모든 서울시장 후보가 아마 5년 정도의 기간동안 해야 할 과제들을 준비하고, 이 선거에 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연장선상에서 만약 낙선하더라도 기본소득이 어떻게 서울시에서 시작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의식을 갖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내년 대선에도 후보를 내실 건가요?

- 논의를 해야죠. 대선과 지방선거를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정과제를 다루는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이 원 이슈까지는 아니어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후보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고민할 거고요. 그리고 광역단체 비례대표, 광역시도 비례의원들의 경우는 다 출마시킬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을 당장 선거 끝나자마자 시행해야 돼요. 후보 발굴부터 후보 교육, 이번 서울시장 선거 준비하면서 광역단체에 대한 대략적인 상을 구상한 편인데, 이런 것들을 시도마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대선 때 독자 후보를 내고.

지금은 다 열어놓고 고민한다.

상황이 유동적이니까.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민 중이다?

- 맞아요. 너무 다이나믹하네요, 정치.

### 대선에 참여하되 어떤 방식일지는 열어 놓고 논의

앞으로의 본인의 비전, 포부? 아까 그 말씀은 안 해 주셨는데.

- 저의 앞으로의 비전이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인데, ‘신지혜가 만드는 서울은?’, ‘신지혜가 하고 싶은 정치는?’ 이런 질문의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일단 기본소득당을 창당할 때부터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굉장히 유효한 수단 이 정당이고 정당정치에 참여라고 생각했구요, 생각을 같이 하는, 다시 말해 정당을 통한 정치운동을 해보자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창당을 했어요. 저희가 하고 싶은, 그



사진 © 양희석

리고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소득 자체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몇 푼의 돈을 쥐여 주는 게 다가 아니고, 내 것을 내 것이다, 라고 정당하게 요구하고 보장할 수 있는 국가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밀레니얼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갖춰야 하는 기본들을 더 촘촘히 만드는 일들을 계속 기본소득당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되겠죠.

끝으로 계간 《기본소득》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2019년에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105조 원가량이라고 해요.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불로소득 전체의 3분의 1이나 몰려 있을 정도로 서울은 정말 불평등이 압축된 곳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서울시민들께 제안드리는 방향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 서울시민들과 함께 정의로운 경제를,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서울의 모습을 같이 상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보궐 선거 이후 기본소득당과 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있었으면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음 일정이 있으시니 여기서 마쳐야겠지요? 오늘은 더 이상은 곤란하시죠?

- 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